

이라크전 파병반대 이유(동국대 박순성 글 포함). 2003년. 출처 참여연대

이라크전 파병은 왜 안 되는가?

- 파병 반대 7 가지 이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2003. 3. 27.

1. 전쟁은 민주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국익 추구에도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이 있다.

미국은 이라크에 나흘 동안 1,000여 기의 미사일과 유도폭탄을 투하하는 등 인류가 아직까지 목격하지 못한 가공할 화력을 퍼붓고 있다. 기껏해야 5 달러짜리 방공호에 숨어있을 대부분의 이라크인들은 5천, 5만 달러짜리 폭탄에 산산 조각나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수십만 명의 이라크인들이 다시 한번 눈앞에서 찢겨나간 가족과 친구들의 시신을 주워담아야 할 것이다.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저승사자와 함께 살아야 할 것이다. 열에 하나 불행하게 살아남을 그 아이들과 후손들은 오랫동안 이 전쟁을 저주하고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할 것이다.

전 세계 시민들과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이 전쟁이 석유이권과 세계패권을 행한 부도덕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전쟁에 정부가 동참한다고 나설 이유가 없다.

전쟁은 민주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특히 이라크전과 같은 '노골적인 약탈전쟁'에 끼어들어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을 저울질한다거나, 이라크인 수십만 명의 피바다 위에서 한반도 평화를 보장받을 것을 거래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익추구에도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은 있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익'이니 '실리'니 하는 그럴듯한 말로 노골적인 약탈에 가담하는 공범행위를 포장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일방적 전쟁 역시 불가항력적인 것인양 호도하고 포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한 원칙준중, 당당한 외교와는 거리가 멀다. 정부와 정치인들이 당연한 것처럼 주장하는 여러 '국익'과 '실리'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이 전쟁에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2.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불법침략이다.

이에 대한 지원행위 역시 전쟁범죄이다.

국제법 상 다른 국가에 대한 무력행사나 무력위협은 다음의 두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1) 유엔안

보리가 유엔 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분쟁 해결을 위해 무력사용을 결의하거나, (2) 유엔헌장 제51조에 따라 외부 공격에 대한 자위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요컨대 군사 행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승인되거나 자기 방어를 위한 경우일 때만 용인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는 불법적 침략이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 계획은 국제법상 무력사용이 가능한 두 조건 중 어떤 것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미국은 그럴 뜻도 가지고 있지 않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유엔의 결의를 얻지 못했다.

미국은 불법침공 문제가 쟁점이 되자 유엔 안보리 결의안 1441호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안 1441호는 이라크에 대한 무기사찰 재개를 요지로 하는 결의문이며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해체 불이행에 따른 무력침공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전쟁을 위해서는 별도의 안보리 결의를 필요로 하지만 미국은 안보리 결의 없이 전쟁을 시작하였다. 미국이 전쟁 시작 전에 전쟁을 위한 별도의 유엔결의를 시도했다는 사실은 미국 역시 전쟁을 위해서는 안보리 결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반증한다.

정권교체를 위한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다. 중동에서 미국은 '모든 독재의 근원'이었다.

미국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이라크에서의 '정권교체 (regime change)', '사담 후세인 제거'와 관련해서는 그 어떤 무력행위나 간섭행위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외에 그 어떤 국제법에서도 이러한 목적의 무력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담 후세인 정권'이 아무리 몹쓸 독재정권이라 하더라도 무력간섭행위가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미국이 독재정권에 대해 군사적 개입을 해야 한다면, 현재에도 지구상에는 무수히 많은 독재정권이 존재하며 미국은 이 모든 독재정권의 교체를 위한 전쟁을 벌여야 할 것이다. 게다가 사실 독재정권과 관련해서 말한다면, 역대 미국정권은 무수히 많은 독재정권을 지원하였다. 미국은 '자신들의 독재자'가 권력을 장악하지 않고 있는 독재정권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유엔의 이라크 사찰단이 밝혔듯이 미국 CIA가 제기한 이라크의 이동식 대량파괴무기 생산시설에 대한 증거가 없고 어떠한 시설물에서도 생물, 화학무기의 생산 또는 저장시설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부시 미국 행정부가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의 핵개발계획을 입증할 자료로 내세운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최근 폭로한 바 있고, 미 상원 정보위원회 제이 록펠러의원(민주)이 3월 14일 연방수사국(FBI)에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그리고 사찰단은 이라크가 현재 장기 미해결 무장해제에 관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 전 개전 후 바스라 지역에서 화학무기 공장으로 보이는 건물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으나 이 역시 미국의 증거조작인 것으로 밝혀졌다. 설사, 전쟁 과정에서 일부 화학무기 제조 공장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유엔 안보리에서의 무력제재 결의가 없는 이번 전쟁이 불법전쟁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

이라크 침공 지원은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이 된다.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주도적인 외교로 지난 2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출범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절대다수 국가가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을 지지하고 제도화한 이유는 바로 국제사회에서 반복되는 집단살해죄, 타국에 대한 침략범죄, 국가간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법과 관습의 중대한 위반(소위 전쟁 범죄) 행위를 체계적으로 처벌하여 그 싹을 근절하자는 데 있었다. 더구나 한국은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적극적 역할을 하면서 초대 재판관까지 배출하는 등 국제적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참여한 바로 그 정책에 따르면 이라크 침공 지원은 동맹국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범죄행위에 대한 공범행위이다. 조만간 상당수 국가의 법률가가 참여하는 (민간) 국제전범재판소 운동이 국제시민운동의 연대로 전개될 예정이다. 이라크 침공 참전국가는 모두 피소 대상이 될 것이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설사 피소되지 않더라도 침략범죄에 동조한 혐의는 다방면에서 제기될 것이며 국제정치사, 국제법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 경우 국가위신에 커다란 손실을 입을 것은 자명하다.

3. 이라크전 파병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 제69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라고 선서함으로써 무엇보다도 헌법을 준수하여야 할 엄중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모든 국민 앞에 약속하였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5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명시하여 국제평화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6.25.라는 민족사에서 가장 잔혹한 전쟁 피해를 겪은 주인공이기도 하기에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상의 조항은 이와 같은 쓰라린 역사의 경험에서 뒷받침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헌법 제6조 제1항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하여 국제법을 존중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1차 대전을 겪으면서 인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결성한 국제연맹을 축으로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법상의 원칙을 정하였으며, 그 결과 1928년 부전조약이 다자간 조약으로 채택된 바 있다. 2차 대전에서의 막대한 인명의 살상은 전쟁을 금지하는 내용을 넘어서서 무력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는 인류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그 결과 미국이 주축이 되어 UN체제가 탄생하였으며 그와 같은 정신은 UN헌장에 명시된 바 있다.

UN을 중심으로 국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침략전쟁'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의 대 이라크 전 참전을 내용으로 하는 국군 파병을 결정한 것은 결국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일 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의 UN체제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국익'을 위해 참전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적어도 그와 같은 결단은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익 확보'라는 '목적 수행'을 위하여 이라크 전 참전이라는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국민참여 정부의 헌법적 기반과 도덕적 정당성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대통령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적어도 헌법의 범위 내에서, 헌법이 용인하는 수단에 국한되어야 한다.

4. 전세계적인 이라크전쟁 반대여론을 등지는 것은 경솔하고 위험하다.

- 골목대장론의 함정

미국의 요청에 거부하는 것에 따른 압력은 적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이에 편승하여 오히려 적극적인 패권옹호론을 펼치기도 한다. 이른바 골목대장론이 그것이다. 어차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질서에서 골목대장 격인 미국의 가치와 기준으로 세계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에 편승해야 한다는 논리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골목대장론은 최근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심각한 인식상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 도처에서 일고 있는 반전여론의 압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부시행정부와 미국을 동일시하는 것도 금물이다.

우리는 지금 범세계적이고 자발적인 대규모 반전·반미의 물결을 목도하고 있다. 일찍부터 캐나다, 독일, 영국, 미국의 고위관료들이 부시행정부의 선제공격론을 비판하며 사퇴하는 전례 없는 연속사퇴가 발생했고, 유럽연합과 NATO, 유엔 등 미국의 텃밭으로 인식되던 동맹 또는 연합구조들이 모두 분열되었다. 각국 내의 반전 여론 때문이다. 심지어 캐나다, 멕시코 등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경제활동의 대부분을 미국과 공유하고 있는 인접국들도 전쟁을 반대했다.

아랍권의 반전·반미 불길도 결코 우리와 무관한 현실이 아니다. 전형적인 제국주의적 전쟁 앞에서 아랍권의 반미·반전 분위기는 전에 없이 고조되고 있다. 국력이 약한 아프리카 45개국조차 이라크침공 반대를 공동으로 표명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전쟁반대 전쟁의 결정권을 가진 현 유엔 안보리 이사국 중 다수가 이라크전에 반대했고 유엔 사무총장 역시 유엔 안보리 결정을 무시한 이라크 침공을 전례 없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러한 절대다수 국가들의 전쟁반대 입장이야말로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국제적 현실이다.

미국과 기독교계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직접 테러공격을 당한 뉴욕시 의회가 전쟁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라크전 개전 후 미국 내에서 전쟁지지 여론이 높아졌으나 이 역시 미국 내 각계에서 터져 나오는 반전여론의 거대한 저항에 흔들리고 있다. 특히 이라크 전쟁 참전 중 사망한 미군 병사의 어머니가 전쟁 중단을 호소하는 등 예상치 못한 반론에 부딪히고 있다. 부시행정부의 재선 가능성은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라크전이 장기화되거나 후세인 제거 후 미국 중심으로 운영될 이라크 군정에 대한 이라크 민중들의 저항이 지속된다면 부시정권은 점점 더 심각한 반대여론에 부딪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연설 끝에 늘 God bless America를 외치지만 로마 교황청, 전미기독교협회 등 종교계가 분명한 전쟁반대의사를 표시했다. 교황은 지난 개전 후인 지난 3월 25일에도 전 세계 군대의 가톨릭신자 군인들에게 “바티칸의 인도주의적 법률에 기초한 바티칸의 방침을 수행하라”는 반전 메시지를 보냈다. 교황은 또한 “오늘날 평화를 염원하는 거대한 움직임들이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다양한 종교들이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희망과 위안을 느낀다”고 세계적 규모로 진행중인 반전운동을 지지했다.

미국에 대한 최악의 세계 여론 수준, 이는 그 자체로 외교의 실패를 의미한다. 뉴욕타임스는 부시행정부의 이라크 전쟁 강행에 대해 외교실패의 절정이라고 혹평한 바 있다.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최근 미 국무부 조사에 따르면, 세계여론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보다 부시행정부를 더 큰 위협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들이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찌’, ‘마피아 방식’과 같은 비외교적인 수사를 동원할 지경이 되었고, 미국이 내놓은 이라크 민주화방안, 중동평화안은 내용이 알려지기도 전에 비웃음을 사고 있다.

지미 카터 미 전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개탄한 것처럼,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규탄받고 조롱당하는 미국 행정부는 없었다. 강대국들은 물론 약소국들까지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반전평화는 결코 감정적인 또는 이상주의적인 태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부시정부의 독선과 일방주의적 외교의 완벽한 실패와 교섭에 기초한 것이다. 이 오만함은 거대한 군사력으로 일시적으로 지탱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민심을 잃은 이상 오래가지 못한다.

한국 정부는 세계 여론과 절대다수 국가들의 비난이 빗발치는 가운데 전쟁 지지와 파병입장을 밝힘으로써 미국 부시 행정부의 패권주의에 줄을 서고 말았다. 그것도 쫓기듯 서둘러 강행함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협상력을 극대화할 기회조차 잃어 버렸다. 이는 앞으로 새 정부의 새 외교 수립에 커다란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줄서기 용병국가로 비난받으면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한가운데에서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Post-Bush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정부의 일방적 부시 추종 외교는 합리적 처신이라 할 수 없다.

5. 부시의 이라크 선제공격에 대한 지지는 한반도위기를 불러올 자충수다.

- 한국정부의 이라크 침략전쟁 지원은 가자당착, 자승자박

현재 미국의 대이라크전은 부시의 '선제공격 안보독트린'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불량국가들의 잠재적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공격한다는 것으로 엄밀히 말해 방어적 의미를 함축한 전통적인 '선제공격'이라기보다는 '예방공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시의 이러한 공세적 안보독트린은 9.11 테러와 아프간 전쟁을 거치는 동안 구체화되었다. 부시 대통령은 2002년 3월 9.11테러 6개월 기념식에서 "테러와의 전쟁이 제 2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은 앞으로 지구촌 전체의 테러 네트워크가 완전히 무너질 때 끝이 날 것"이라고 천명하여 대테러전쟁을 일종의 영구전쟁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즈음 미국정부는 본토방위 강화라는 명분으로 부시행정부 핵심각료들과 그들을 지원해온 군수업체들이 수십 년간 추진해 왔던 MD 구축을 기정사실화하고,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하는가 하면, 17만 명 규모의 국토안보부를 신설하는 등 군비확장을 국가시스템화 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한편, 부시는 2002년 연두교서를 통해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명한 후, "이들 나라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게 놓아둘 수는 없다"고 밝힘으로써 2단계 테러와의 전쟁 대상국을 사실상 지목했다. 이들에 대한 처방은 같은 해 6월 웨스트포인트 졸업식에서 행한 부시의 연설을 통해 한층 분명해 지는데 그것이 바로 선제공격론이다. 부시는 "위협이 완전히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면 이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며 전통적인 '억지전략'을 폐기하고 '선제공격'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게다가 그 뒤 의회에서 작성된 '핵태세보고서'는 불량국가들에 대한 핵선제공격까지 명시함으로써 핵무기를 억제수단 또는 전쟁종결수단이 아닌 전쟁수행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부시의 전략과 구상이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미국의 현 집권세력과 그들을 뒷받침하는 군수업체들이 오랫동안 구상하고 로비해온 결과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부시행정부의 글로벌 전략의 핵심이자 정치적 이해관계의 핵심인 것이다. 한국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나선 이라크 전쟁은 이 구상의 서막에 불과하다. 미국의 다음 표적은 이란과 북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의 고위관리들이 수차례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전 참전을 요구하면서 이면에서 무엇을 약속했는지 아니면 어떤 협박을 했는지 알 수 없으나 만약 부시가 약속한 것이 '한반도 평화'라면 이는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평화적 해결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이는 부시행정부가 재선에서 탈락하여 정권이 바뀌거나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제적 압박으로 인해 국제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한국의 참전에 대한 대가로서가 아니라 이라크전쟁 과정에서 미국이 부딪히게 될 전세계 반전여론의 총량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이 점 때문에라도 참전

은 거부되어야 한다.

사정이 이렇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부시행정부의 선제공격독트린의 지지하여 참전한다면,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할 명분을 잃게 될 것이다. 만약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무력제재를 검토하는 국면이 조성되면 한국정부는 증거도 불충분한 상태에서 유엔의 엄격한 사찰이 진행중인 이라크를 침공하는 데 협력했던 전력으로 인해 외교적 입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스스로의 조정자적 위치와 정당성을 훼손시켜 버린 지승자 박의 결과이다.

6. 이라크 전 이후 한반도 정세, 북-미 긴장은 필연적이다.

- 정부의 미국편중 외교는 북한과 다른 인접국과의 갈등예고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에 대한 선제공격 지지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반대 외교를 펴는 데 축쇄로 작용할 것이라는 경고를 애써 무시하면서, 현실외교적 측면에서는 한미동맹의 공고화를 통해 미국에 대한 발언권을 높이는 것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물론 이라크 전쟁 이후 북한에 대한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단순하게 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은 북미관계를 긴장과 갈등으로 몰아갈 것이 명확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대다수 전문가들 역시 그렇게 관측하고 있다.

우선, 이라크전이 단기전으로 끝나 미국의 패권적 입지가 강화되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설사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가시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한은 심한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의 반응을 짐치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까지의 북한의 행동으로 미루어볼 때 북한은 강경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관련하여 이라크가 무기사찰에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전쟁을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유엔의 사찰활동의 대가로 자국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북한이 유엔의 사찰요구와 관련 협약(NPT등)을 묵살할 충분한 명분을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북한은 NPT체제 복귀 및 IAEA 핵사찰을 거부할 것이 명확하며, 나아가 핵재처리를 강행하거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재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불가피한 자위적 조치임을 주장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는 북미간 긴장을 새롭게 고조시킬 것이며 이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정부에게 약속했다는 '북핵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서 얼마든지 '사정변경'의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칭 외교전문가들의 말을 빌리자면 '현실외교에서 명분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미국은 그들의 이해관계대로 한반도 문제를 다룰 것이다.

한편, 이라크전이 장기전으로 접어들어 부시행정부의 입지와 관심이 약화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이라크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이미 이라크보다 더 심각한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대해 이라크와는 다른 이중기준을 적용한다는 비난이 있는 마당에 북한 핵문제의 극적인 타결에 미국정부가 나설 것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또한 북한과의 포괄적 관계개선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전략의 빌미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부시 행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다만 미국은 북한문제를 장기화하면서 시간을 벌고자 할 것이다. 미국이 북폭이나 경제제재 등 새로운 제재수단을 찾지 않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일종의 '무시정책' 또는 '장기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경우 상황의 교착 그 자체가 재난과 같은 것이므로, 북한은

계속 자극적인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나아가 부시 행정부의 국제적 입지가 약화된 것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수위를 높이거나 북한 위협을 발미로 한반도에 MD를 구축하기 위한 압력을 가해야 할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량살상무기의 증거조차 발견하지 못한 이라크보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화학무기로 국제적 관심을 돌리는 것이 자신의 패권전략의 정당성을 찾는 데 수월하고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라크전 후에 북-미관계가 예상치 못한 극적인 해결의 길을 찾을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 자체가 그 가능성을 전쟁 전보다 더욱 줄어들게 만들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갈등은 이라크에서 유엔을 통한 해결 노력을 거부하고 심지어 선제공격독트린을 실제로 구사한 부시행정부의 패권적 태도로 인한 것이다. 이는 북-미간을 국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파병을 통해 한미동맹을 공고화하는 것이 이후의 북미관계 해결에 어떤 도움을 준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것은 과연 한국정부가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일방주의적 태도를 지지지원함으로써 잃게 될 것들, 예를 들어 북한에 대한 조정력의 약화, 다른 나라들을 설득할 수단과 명분의 상실 등의 외교적 기회비용과 맞바꿀 만한 것인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

7. 이라크 전 지지와 참전은 참여정부, 당당한 외교의 파산선고다.

- 민주주의와 개혁, 평화와 자존에 대한 냉소주의 심화될 것

지금 노무현 정부는 심각한 이율배반에 빠져들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비인도적 불법전쟁에 편승하여 알팍한 실리를 쟁기기를 선언하는 등 '원칙'과 '참여'라는 신정부 출범의 가장 중요한 가치기준과 배치되는 행보를 하고 있어 그를 지지한 국민을 심리적 공황상태로 만들고 있다.

원칙의 훼손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지지한 대다수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원칙중시' 정치경력을 높이 평가했다. 현 정부를 지지한 대다수 국민들의 요청은 '정정당당 정치, 정정당당 외교'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지금에 와서 '실리'와 '국익'을 위해 정당치 않은 전쟁에 동참하자고 국민을 몰아세우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자신을 지지했던 국민들이 가장 혐오하는 것 즉, 정의와 원칙은 알팍한 실리를 위해 당분간 접어두자고 국민을 설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참여의 부재

이러한 이율 배반은 '참여정부'의 정체성 위기로 확대되고 있다. 집권 후 토론공화국을 만들겠다고 노무현 대통령의 약속은 집권초기부터 파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파병결정과정에서 노무현 정부는 일체의 국민참여를 배제했다. 마치 작전 하듯이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기습적으로 파병을 결정했고, 집권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 역시 공청회나 위원여부에 대한 충분한 심의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일사천리로 파병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 이들은 '국익'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익'의 이름으로 불법적인 전쟁에 대한 파병안이 강행되는 이 순간에도 과연 무엇인 국익인지, 진정한 국익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는 모호하고 불투명한 채로 남아 있다.

체념과 냉소의 확산

노무현 정부와 국회의 파병안 추진 과정은 국민들을 심각한 도덕적 혼란과 갈등으로 내몰고 있다. 강대국 줄서기, 침략 전쟁 지원 등 힘의 논리에 대한 정당화와 숙명론적 자기비하는 국민을 심각한 가치혼란과 냉소로 내몰 것이다. 교육현장에서의 혼란도 무시할 수 없다. 국제관계에서의 힘의 논리의 정당화는 각종 사회적 폭력에 대해서도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정부의 미 이라크 침공 지원 불가의 10 가지 근거

1. 미국의 무력사용은 '전쟁'이 아닌 불법 '침공'

- 유엔 안보리의 무력사용 결의 없었음
- 유엔 헌장 51조에 따른 자위권 발동요건 없음
- 1차 걸프전 당시(1990년)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678호) 유효성 없음, 미국의 2차 결의안 상정 시도 자체가 그것을 증명(안보리 결의안 678호,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무력사용 승인)
- 유엔 사무총장 코피아난,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 없는 무력사용에 대한 불법성 반복해서 언명

2. 한국 정부, 국제법 위반 책임져야 할 처지

- 국제법 위반행위에 동조, 동참
- 벨기에 등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국내법으로 제소할 수 있는 나라의 경우 이번 침략범죄의 책임자를 그 나라 사법기관에 사법처리 의뢰할 수 있음 (최근 조지 부시 전(前) 대통령과 콜린 파월 현 국무장관 등 4명의 미국 지도자들이 지난 91년의 제1차 걸프전 당시 전쟁범죄 혐의로 벨기에 법정에 공식 제소됨)
- 국제형사재판소법에 의거, 피소될 수 있음(침략범죄 혐의); 피소되지 않더라도 침략범죄에 동조한 혐의는 다방면에서 제기될 것이며 국제정치사, 국제법사에 기록될 것임, 국가위신에 큰 손실.
- 조만간 상당수 국가의 법률가가 참여하는 (민간)국제전범재판소 운동이 국제시민운동의 연대로 전개될 예정. 이라크침공 참전국가는 모두 피소 대상이 될 것이고 역사에 기록될 것임.

3. 사실상의 암살공작 지원의 문제

- 부시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사담 후세인 제거"와 "정권 교체"는 문명국가의 어떠한 법제에서 허용되지 않는 사실상의 '암살 공작'임. 전쟁수행에 해당되지 않음.
- 사담 후세인 살해의 경우, 한국정부의 미국 지원은 미국의 '암살 작전'을 지지, 지원한 결과로 됨.
- 부시 행정부가 허용한 해외 요인 암살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비판, 견제할 외교적 입지 부재하게 됨.
- 한국 외교역량 발전에 큰 오점.

4. 전쟁 수행 방식에 대한 법적, 윤리적 검토 생략의 위험성

- 미군은 열화우라늄탄, 모압(MOAB) 폭탄, 집속폭탄을 사용할 예정이고 전술핵무기 사용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
- 침공을 지원하면서 구체적인 침공방법에 대한 검토를 일체 생략함으로써 불법 무기, 비윤리적 무기의 사용을 자동적으로 정당화하는 위험성 큼.
- 이는 국제적으로 어렵게 합의되어온 무력사용의 기본 원칙에 큰 혼선을 초래. 현재 비윤리적 무기 개발 추세로 볼 때 매우 위험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임.

5. 세계 대다수의 반전 국가에 대한 외교적 대책 부재

- 향후 반전국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외교 위상 추락
- '미국에 종속된 국가'라는 국가 이미지, 국익에 커다란 손해 야기
- 유럽연합, 나토, 유엔을 분열시킨 부시 행정부의 외교가 가져올 부정적 파장에 대해 무대책
- 이라크전 파병이 향후 전투병 파병으로 이어지거나, 미국의 다른 해외전쟁에서 전투병 압력이 있을 경우, 주변국의 견제 우려됨

6. "참여정부" 새 외교의 첫출발로 부적절

- 첫 주요 외교가 불법 침략행위 지지, 참여
- 침공 지원에 따른 '국익' 설명 부재
- 국내 여론수렴 및 적법성 검토 없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라크전 지지, 지원 선언
- 한반도 평화보장에 대한 보상측면 불확실
- 중동정세 악화시, 지속적인 책임 부담
- 이라크 점령 후 영, 미의 석유자원 쟁탈 진행될 것임. 영미의 석유장악에 실리없이 동조한 결과가 될 것임

7. 외교 혼란, 외교력 약화 초래

- 문민정부이래 한국은 국제법의 효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교 전개
- 2003년 출범한 국제형사재판소에 중요한 기여, 초대 재판관 배출
- 이라크 침공 지원은 국제형사재판소가 다룰 핵심 범죄, 침략범죄와 전쟁범죄 위반에 공모하는 것으로, 국제법 강화의 외교 노선을 스스로 부정하게 됨
-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활동에 대한 윤리적 지지를 국외에서 기대하기 어렵게 됨
- 윤리적 지지기반 없는 외교는 곧 국가 위상 약화, 외교역량 약화와 동일

8. 향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자승자박 외교

- '줄서기 외교'의 이미지를 정부출범 초기에 확산. 독자외교 개척에 족쇄가 될 것임.
- 부시 행정부의 '예방전쟁' '선제공격' 독트린을 무책임하게 지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자승자박하는 결과 초래
- 부시 행정부의 '선제공격 독트린'은 '핵무기 사용가능성'을 포함. 이에 대한 공론화나 검토가 일체 생략됨. 이번 침공 지원으로 적법한 검토 없이 위험한 지지하는 결과로 됨.
- 전례없는 범세계적 반미정서 확대와 반전행동에 직면한 부시 행정부의 외교실패에 대한 대책이 없음. Post-Bush를 모색하는 데 족쇄로 작용.
- 국내에서 '보복형' 테러 발생시, 안보정치 자동 확대, 민주주의 위축, 개혁입지 위축. '보복형' 테러에 대한 사회적 우려 그 자체로서도 유사한 효과 야기
- 외교안보 분야에서 대미종속외교론 측 입지 강화, 자주 외교론 입지 약화
- 정치권에서도 역시 대미종속외교론 측 입지 강화, 수구세력 단결에 기여
- 사회적으로 수구 대미추종 세력의 입지 강화. 신 외교에 대한 합의기반 약화
- 개혁의 정치적 사회적 기반 위축, 개혁노선에 큰 타격

9. 민주주의 실현에 큰 타격

- 대미 외교를 민주적 검증에서 예외 영역으로 정당화. 민주주의 발전에 매우 위험.
- 향후 밀실 외교, 뒷거래 외교에 대한 감시, 견제에 커다란 장애
- 외교 안보 분야의 국가권력 통제불능의 가능성(강대국의 압력 등 정책수립과정에 대한 통제불능의 가능성)
-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한 국민의 냉소주의 가능성. 민주주의 발전에 매우 위험
- 민주주의 발전의 기대를 안고 취임한 대통령의 신뢰도 추락(침공 지원 담화에 법적 타당성, 윤리적 명분 일체 생략. 언급된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우려는 근거없음)
- 불필요한 경계 태세와 긴장 조성으로 개방 문화, 민주적 참여 문화 위축
- 안보주의 세력의 재등장에 우호적인 여건 조성

10. 국민의 윤리관, 가치관 큰 혼란

- 무고한 이라크 희생자들에 대한 죄책감, 그 사회적 파장 매우 클 것임.
- 강대국 줄서기에 따른 외국 침략, 아동 청소년 가치관에 큰 혼란. 교육현장에 혼란 야기
- 이라크에 남아있는 한국인(반전평화팀)이 폭격, 사상될 경우 커다란 충격과 반향을 야기할 것임.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추궁당할 것임.
- 침략을 외교상 거래로 정당화, 윤리적 외교에 대한 기대감 큰 좌절
- 반전여론 급속 확산, 주도적인 동북아 외교에 필요한 내적 통합성 약화
- 향후 자주외교역량 개발에 피해. 젊은 외교관 지망생들, 자주외교 전망에 비관할 것임
- '힘을 통한 해결'의 정당화, 사회적 폭력 증대 및 각종 폭력의 정당화에 기여할 듯

미국의 이라크 침공 불법성 및 명분의 허구성

1. 이라크 침공의 불법성(위 1항과 동)

- 2003년 3월 20일 미국이 개시한 무력사용은 '전쟁'이 아닌 불법 '침공'
- 유엔 안보리의 무력사용 결의 없음, 유엔 헌장 51조에 따른 자위권 발동요건 없음
- 1차 걸프전 당시 (1990년)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678호) 유효성 없음
(올해 2차 결의안 상정 시도 자체가 증명, 안보리 결의안 678호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무력사용을 승인.)
-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 없는 무력사용에 대한 불법성,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이 반복해서 언명.

2. 이라크는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음

- 이라크는 중동지역에서 최약체의 군사력을 갖고 있음
- 이라크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핵무기 생산능력이 있다는 증거는 없으며 미국 정부가 제기한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폭로
- 미국측 생화학무기 개발 증거 제출하지 못함
- 대량살상무기 운반수단 (장거리 미사일) 없음
- 이라크와 알카에다의 연관성, 증거 제시된 바 없음
- 3. 20일까지의 유엔 무기사찰로 미래의 잠재적 개발 가능성 무력화시킴
- 1차 걸프전 때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도 미국, 이스라엘에 사용하지 않음(억지력 존재)
- 이라크의 생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은 미국 침공시에만 존재

3.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중 잣대 적용

- 미국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의 불법 핵무장에 대해서는 용인, 동맹국 대우

4. 오히려 테러리즘 확산에 기여

- 이라크와 알카에다의 연관성 입증 부재
- 이라크 침공으로 테러리즘 오히려 확산, 장기화. 테러 지원자 증가 예상
-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역효과 발생
- 다수 국가 국내치안 비용 급증, 치안조치 확대, 민주주의 및 시민 자유 축소

5. 유엔의 무기사찰 활동 무력화

- 이라크에 대한 유엔의 무기사찰단 활동, 분명한 효과 있었음. 1차 걸프전 이후 유엔 무기사찰단의 이라크 사찰은 매우 많은 양의 대량살상무기 파기에 성공적으로 기여함
- 이번 무기사찰단의 보고도 활동의 효과성 입증
- 이번 이라크 침공으로 향후 다른 국가에 대한 무기사찰단 위신 추락. 활동 재개 거의 불가능
- 북한에 유엔 무기사찰단 활동을 촉구할 근거 자체가 사라짐.

6. 예방전쟁독트린의 위험성

- 국제법 및 인간성에 대한 위협
- 지금까지 합의된 전쟁에 대한 법적, 도덕적 제한 해체
- 전쟁 역지의 마지막 보루로서 유엔 무력화
- 강대국의 무력행사에 대한 외교적 억지력 상실
- '침공의 시대' 예고

7. 제국주의 사상 확산

- 현재 미국내 강경파들은 군사행동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선한 제국론'을 설파중임.
- 제국주의 정당화는 세계 각 지역에 군비경쟁, 패권경쟁, 무력충돌을 확산시킬 것임
- 아시아에서는 중국을 자극, 중국내 민족주의를 확산시키고 중미 갈등을 촉진할 가능성 높음
- 제국주의 사상과 민족주의의 대두는 전반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를 야기할 것임

미·영-이라크전쟁과 한반도 평화

박순성(동국대)

1. 문제의식

- 유엔의 반대와 세계적인 반전여론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라크에 대해 공격을 시작함으로써 21세기 인류사회는 심각한 혼란에 직면하게 되었음
 -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마비됨
 -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계질서의 구축(미국의 자국 이익만을 고려하는 일방주의에 대한 견제, 테러 방지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위한 평화적이고 효과적인 국제협력수단 확보 등)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정치경제체제의 수립(비민주적이고 불평등한 정치경제체제의 전환)을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와 효과적 방안을 찾기 힘들게 됨
-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국익을 고려하여' 미국의 대이라크전쟁에 대해 지지를 선언하고 파병을 결정함으로써, 한국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심각한 반대여론이 형성되었음
 - 한국 정부는 현재 북한의 핵무기개발프로그램을 둘러싼 북·미간의 긴장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익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음
 -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난 국민들의 견해는 '전쟁에 반대한다'가 80%를 넘지만, 파병 자체에 대한 찬반양론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
 - 전쟁과 파병 모두에 반대하는 평화애호세력, 전쟁에 반대하지만 국익을 고려하여 파병을 수용하는 현실주의세력, 전쟁에 찬성하며 한미동맹에 따라 파병을 주장하는 전쟁지지세력 등으로 국내 여론이 크게 나누어진다고 판단됨
- 전쟁 자체와 파병을 둘러싸고 국론이 다양하게 표출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일이며, 지금은 민주적 토론과 입법과정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국가정책을 결정해야 할 시기임
 - 한국이 처한 특수한 안보상황(정전체제 하의 분단국, 비대칭적인 한미동맹에서 약소국의 지위, 변화하는 남북관계 등), 특히 북·미 갈등의 지속을 고려할 때, '국론 분열'은 자연스러운 현상임
 - 이러한 상황에서 현명한 정책결정을 내리기는 쉬운 일이 아니므로, 충분한 민주적 토론과정이 필요함
 - 정부가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결정하였으므로, 국회는 파병동의안을 절차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해야 함
 - 국회의 결정과 국민의 여론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지나친 피리는 민주적 절차에 대한 불신을 낳을 것임

- 우리는 미국의 대이라크전쟁이 지닌 부당성과 불법성을 지적하고 한국 정부의 '국익에 기초한 변론'이 적절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음을 논박함으로써, 파병동의안에 반대하고자 함
 - 소위 '국익을 고려한 전략적 결정'이 지닌 논리적 모순과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고, 파병이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로도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밝히려고 함

2. 동요하는 세계질서와 변화하는 사회의식

- 파병 관련 논의가 '국론분열의 양상'으로까지 비화되기에 이른 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질서 및 한반도질서의 변화, 한국 사회의 의식 변화 등을 살펴야 함
- 미-이라크전쟁(이후 '이라크전'으로 줄임)은 미국 중심의 단일패권체제에 내포된 모순이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함
 - 미국의 단일패권체제 형성과정은 경제와 문화의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치장되고 있지만, 빈곤과 갈등의 세계화를 내포하고 있음
 - 새로운 패권질서의 지배자인 미국은 단일패권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잠재적인 적대세력을 압박하는 정책을 추진함
 - 특히 미국의 부시 정부는 '문명충돌패러다임'과 '근본주의적 종교관'을 결합한 단순화된 세계관에 기초하여, '힘에 의존한 패권 유지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함
 - 9-11테러는 미국 중심의 패권체제에 대한 아랍문명의 극단적(따라서 정당화될 수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대응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9-11테러 이후 부시 정부는 무력행동을 단일패권체제 유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공격을 정당화하기 시작함
- 이라크전과 관련한 세 가지 사실
 - 미국의 단일패권체제 하에서 미국의 일방주의는 쉽게 견제되지 않음; 이는 세계질서의 극단적 불균형을 보여주는 동시에 2차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유엔체제의 한계를 노출시켰음; 무엇보다도 국익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미국의 정책에 대한 견제는 국제사회의 여론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으며 미국 내 여론의 변화를 요구함
 - 군사적 수단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기란 매우 어려움; 군사적 수단이 평화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보완적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는 관념은 이론적 허구이거나 전략적 속임수(책략)일 뿐임
 - 전쟁은 결코 구상된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지 않으며 전쟁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함; 극단적 수단인 전쟁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수단'의 하나로 선택하는 상태는 이미 비합리적 상황이므로, 전쟁이 발발하고 나면 전쟁의 진행과정은 결코 통제될 수 없음(네이팜탄, 집속탄, 열화우라늄탄, MOAB의 사용; 이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더 잔혹한 대량살상무기); 극단적 상황에서 약자가 굴복이라는 합리적 선택을 하리라고 판단하는 것은 비현실적임; 전쟁의 종식은 전쟁당사자 일방의 패배나 전쟁당사자 쌍방의 한계적 상황에 의해서만 강요됨

- 이라크전쟁은 현존하는 세계질서의 한계를 드러내 보여주면서, 인류사회가 세계평화를 위해 새로운 세계질서를 모색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줌
 - 유엔중심의 안전보장체제(또는 국제기구중심의 다자간협력체제)와 미국 중심의 단일패권 체제 사이의 불안정한 공존은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다고 판단됨(최근 몇 년 사이 미국이 취한 일방주의에 따른, 불구화된 국제협약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중동지역이 분쟁의 중심이 되는 이유는 20세기 물질문명(미국이 가장 극단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의 기초인 석유자원이 집중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지구공간정치 차원에서 전략적 요충이기 때문임
 - 세계적 차원의 경제적 불평등, 군사적 불균형, 문화적 비타협성은 인류 사회가 21세기 세계평화를 위한 새로운 질서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을 보여줌

- 한반도에서 냉전체제는 완전히 해체되지 않았지만, 남북의 화해와 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평화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과도적 상황임
 - 냉전체제의 완전 해체를 위한 교차승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1990년대 말부터 북한의 적극적인 대유럽, 대일본 외교관계 개선 노력으로 교차승인을 향한 진전이 나타났음
 -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현재는 남북이 화해와 신뢰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교류·협력단계로 나아가려는 과도기라고 판단됨
 - 물론 이러한 남북관계의 개선이 주변국의 대한반도 정책, 국제환경의 변화, 북한 내부 사정의 악화 등으로 정체하거나 퇴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 예를 들면, 2002년 10월 야기된 북한 핵개발프로그램을 둘러싼 북·미 갈등은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요인이자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현 시점에서 예상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전망은 북한 핵개발프로그램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면서, 북한의 개혁·개방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남북관계가 본격적인 교류·협력의 단계로 접어드는 것임

- 남북관계의 변화와 함께 한반도에서 안보환경과 안보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동북아지역의 안보질서가 기존의 동맹관계 중심의 대결적 구도에서 지역안보협력체제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라는 제안이 점차 설득력을 얻기 시작함
 - 한미동맹 유지와 남북관계 개선 사이에 존재하는 잠재적 모순이 경의선, 동해선의 육로·철로 연결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남
 - 1993~4년 한반도전쟁위기는 남한 사회의 안보와 관련한 미국의 역할에 대해 일부 회의적인 시각을 낳았으며, 또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남한 정부의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음
 - 변화하는 세계질서와 동북아질서에 걸맞은 새로운 안보정책이 필요하다는 의식도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함

- 최근 남한 시민사회도 분단과 한국전쟁을 경험하면서 형성된 전쟁과 관련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평화를 새로운 가치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음

- 남북정상회담, 남북관계 개선, 한·일월드컵, 촛불추모집회 등을 거치면서, 반세기가 넘도록 강요된 '전쟁을 정책수단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태도'와 '군사주의'를 거부하는 평화애호세력이 일정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음
 -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평화운동단체들이 만들어지고, 국제연대활동이 조직되기 시작함
- 한국 사회의 안보 및 평화와 관련한 인식 변화는 정부의 '국익을 고려한 전략적 결정'을 거부하도록 만들었다고 판단됨
- 이러한 거부는 정부가 안보와 관련하여 '과거에 기초한 관점/정책'을 내려놓고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정책'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3. 정부가 제시한 미국 지지 및 파병결정의 이유

-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대이라크전에 대한 지지 표명과 국군파병 결정을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국익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음
- 노무현 대통령은 파병의 불가피성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를 논의하는 데 명분과 논리도 중요하나 이런 외교적 사안은 현실적 상황인식을 토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며, 덧붙여 "우리의 제1순위 국익인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어떤 전략적 선택이 바람직한 것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음
 -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으로부터 평화적 해결과 관련한 확고한 보장을 받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음
- 정부 내 외교당국자는 미국 지지 및 파병결정과 관련한 몇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으며, 핵심요지는 한미동맹 관계의 유지가 한반도 안보상황 및 남한 경제의 안정에 필요불가결하다는 것임
- 1) 미국이 한국 정부에 대해 지지 및 파병을 요청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이미 이루어졌으며, 2002년 11월 한국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음;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 연속성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음
 - 2) 현 정부 핵심 정책목표 중의 하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국정과제 1)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긴요함
 - 3) 2002년말부터 한미관계는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으며, 우리 정부의 입지가 매우 약화되어 있음
 - 4) 한미동맹관계는 일종의 군사적 관계이며, 군사적 의무를 요구하고 있음; 특히 미국 부시 정부가 '우/적'이라는 이분법적 세계관에 기초해서 세계전략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정책적 선택폭은 매우 좁음; 더욱이 북한핵문제로 한반도 안보상황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한미동맹 관계의 악화는 남한의 경제를 위기로 몰아갈 수 있음
- 일부 파병옹호론에 따르면, 파병이 직접적으로 가져다 줄 경제적 이득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적 고려사항임

- 남한 에너지 수입의 거의 80%가 중동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후 미국의 중동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파병을 할 때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할 것임
- 전후 복구사업 참여가 거대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라크전 참여를 통해 전후 복구사업 참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함

4. 전쟁의 비인간성과 정당하지 못한 전쟁

- 현대 전쟁은 고도로 발달된 대량파괴, 대량살상 무기를 사용함으로써 그 자체로 비인간적인 행위임
 - 미국은 이미 이라크전에서 네이팜탄, 집속탄, 열화우라늄탄, MOAB(Massive Ordnance Air Burst, 공중폭발대형폭탄) 등을 사용하고 있음
 - 특히 열화우라늄탄은 방사능을 방출함으로써 심각한 후유증을 남김; 1차 이라크전 때 미국이 사용한 열화우라늄탄 때문에 이라크인들이 현재에도 고통을 받고 있음
- 수단의 비인간성은 목적 자체의 정당성도 부정하게 됨
 - 아무리 고귀한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수단이 극단적인 야만성을 띠었을 경우 결코 고귀하다고 할 수 없음; 비인간적인 전쟁은 더 이상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가 아니라, 정치를 부정하는 야만행위에 불과함
- 미국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도 정당하지 않음
 - 미국은 테러예방, 대량살상무기 해체, 독재정권 교체 등을 전쟁의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 어느 것도 정당화의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음(아래 '파병 반대 7 가지 이유' 중 두 번째 참조)
 - 미국의 실질적 목적은 이라크 석유자원(매장량 2위)의 지배와 전략적 요충지의 확보라고 해석되고 있음

만일 미국이 독재정권에 대해 군사적 개입을 해야 한다면, 현재에도 지구상에는 무수히 많은 독재정권이 존재하며 미국은 이 모든 독재정권의 교체를 위한 전쟁을 벌여야 할 것이다. 게다가 사실 독재정권과 관련해서 말한다면, 역대 미국정권은 무수히 많은 독재정권을 지원하였다. 미국은 '자신들의 독재자'가 권력을 장악하지 않고 있는 독재정권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셈이다. 중동에서 미국은 '모든 독재의 근원'이었다.

- 더욱이 미국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목적 자체의 달성을 위해서도 전쟁은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없음
 - 전쟁은 보복테러를 불러일으키고, 대량살상무기 획득을 위한 경쟁을 격화시키고, 새로운 형태의 독재정권을 낳을 것임
 - 전쟁이 올바른 수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선택한 것은 미국의 실질적 목적이 다른 곳에 있음을 확인시켜 줌
- 전쟁 자체의 비인간성과 이라크침공의 부당성이 너무도 명백하게 드러난 상태에서 한국 정부가 '국익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주장을 통해 미국 지지와 파병을 국민들에게 요청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음

- 이는 한국의 대외이미지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가치관도 혼란스럽게 만들 것임
- 현실주의는 도덕적 부당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단의 하나이지만, 동시에 타인이 강요하는 현실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드는 함정임

- 전쟁 자체가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의 적법성을 따지는 방식을 통해 국제사회는 도덕적 부담감을 최소화하고 전쟁의 위협도 줄이려고 함

5. 이라크전과 한국군 파병의 불법성

- 유엔헌장은 국제적 분쟁을 평화적 수단에 의해 또한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1조)는 전제 위에, 무력사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하게 정하고 있음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 승인하였을 경우(39조, 42조)
 -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개별적 또는 집단적 지위의 고유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경우(51조)
- 유엔헌장에 따르면 미국의 대이라크전쟁은 적법한 전쟁이 아니라 불법적인 침공이며, 따라서 오히려 이라크의 무력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음
 - 유엔은 안보리의 결의안(1441호)에 따라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무장해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노력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가고 있었음
 - 미국은 유엔의 평화적 해결 노력이 실패하였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후, 새로운 결의안 제출을 포기하고 전쟁을 위한 최후통첩을 발표하고 전쟁이 돌입하였음
 - 분명한 사실은 미국 자신이 참여하여 의결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441호가 이라크에 대한 무력행사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임
 -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 스스로도 유엔의 2차 결의를 추진하였음
- 국제사회는 불법적인 전쟁에 대해 국제법적 책임을 묻는 수단을 강구하고 있음
 - 한국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주도적 외교로 출범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원칙에 따르면, 이라크전 지지와 파병은 범죄행위에 대한 공범행위에 해당됨(한국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초대 재판관을 배출하였음)
 - 조만간 민간 국제전범재판소 운동이 전개될 예정이며, 여기에서 이라크전 참전국가는 모두 피소되고 역사에 기록될 것임; 한국은 설혹 피소되지 않더라도 국가위신에 커다란 손실을 입을 것임
- 미국 지지와 파병결정은 국제법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배하는 불법 행위임
 - 헌법 5조: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 헌법 정신을 위배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국익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국익 자체가 잘

못 설정되었기 때문이거나 또는 국익이라는 이름으로도 거부될 수 없는 가치가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주장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임

- 예를 들면,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사이의 갈등이 존재할 때, 경제성장의 이름으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임

- 파병의 근거로 제시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조차 침략전쟁에 대한 파병을 부정하고 있음
 - 한·미상호방위조약 1조는 국제분쟁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과 국제연합 의무의 준수를 강조하면서, 무력의 행사를 삼갈 것을 규정하고 있음

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른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가할 것을 약속한다.

- 국제법, 국제조약, 국내법을 위반한 전쟁지지와 파병결정이 장차 한반도 위기와 관련하여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원칙의 훼손, 외교정책 내 논리적 모순 등

6. '전략적 선택'과 국가이익

-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서 미국을 지지하고 파병을 결정한다는 논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미공조 강화
 - 한반도 안전보장을 위한 한미동맹 강화
 - 남한의 국제신인도 유지와 경제 안정을 위한 한미결속 강화
-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논의는 최근의 몇 가지 사실에 대해 주목해야 함
 - NATO, NAFTA에 속한 동맹국 및 경제협력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이라크를 침략하였음
 - 미국은 북한핵문제와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수단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음
 - 최근 미국은 주한미군의 재배치 또는 철수를 주장하면서, 북한에 대한 정책수단의 결정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음
 - 동북아시아에서 안보협력 및 경제협력을 위한 노력은 쌍무적 동맹관계 때문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아직 거두지 못하고 있음
 - 북·미관계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이 남한의 국제신인도를 유지시켜 주고 있음
- 한미동맹의 이중적 성격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 전망에 기초하여 한미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안정을 보장하는 장치이면서 동시에 한국의 정치·군사·경제를 미국에 의존하게 만드는 장치임(비대칭적 동맹)
- 한미동맹은 남한의 이익을 위한 장치이면서 동시에 미국의 이익을 위한 장치임; 때로 남한의 이익보다 미국의 이익이 더 많이 고려되는 경우도 있음(상호이익동맹이자 불균등동맹)
- 변화하는 국제질서에서 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정책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점차 작동하고 있음(남북관계 발전, 동북아지역협력 등)
- 중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과 미국 모두는 한미동맹의 성격을 변화시키라는 압력을 내부로부터 그리고 주변국으로부터 받게 될 것임
-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정당하지 못한 전쟁으로 비판을 받고 있을 때, 올바른 한미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임(현실주의적 관점에서나 이상주의적 관점에서나 이러한 고민은 당연한 것임)
- 반대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은 미국이 남한을 더욱 약하게 보도록 만들 것임; 소위 비대칭적 동맹관계가 압력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는 오해를 낳을 것임

○ 현실적으로 한미동맹을 벗어나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빠른 시일 안에 남한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하여 북한과 주변국을 설득할 때 가능함; 특히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북한이 스스로 국제사회에서 핵개발의혹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미국 부시 정부의 대북관을 바꾸기 위한 출발점은 북한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함; 결국 부시 정부의 세계관과 세계전략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미공조에 기초하여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전략은 현재의 긴장상태를 계속 끌고 가자는 주장임; 이는 경제위기에 처한 또는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급박한 처지에 놓인 북한을 벼랑끝전술로 몰아가도록 만들 것임
- 한반도의 안정은 남한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 나아가 미국에게도 필요함; 한반도의 안정 없는 동북아의 안정은 불가능하며, 동북아의 안정 없이는 일본, 중국, 미국 모두 심각한 국익의 침해를 받을 것임; 한반도 안보에 대한 적극적 방어논리 필요
- 남한의 경제위기는 가까운 일본 경제에, 궁극적으로는 세계경제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남한의 경제안정이 갖는 적극적 의미를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전략이 필요함

○ '과거에 기초한 관점/정책'에서 본다면 한미동맹의 약화가 남한 사회의 모든 것을 불안정한 상태에 빠뜨릴 것으로 판단되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정책'에서 본다면 한미동맹의 유지가 남한의 역량과 기회를 제한하는 장애요인으로 인식될 수도 있음

- 장기적 관점에서 한미동맹의 의미를 재규정하는 태도가 필요함
- 현실주의는 '변화하는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약이기도 함
- 미래의 변화된 동북아질서를 상정해 본다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한미동맹을 둘러싼 한·미간의 긴장은 '중대한 변화'의 전조라고 할 수 있음

○ 단기적으로 '국익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은 남한의 대외이미지를 추락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세계화시대 남한의 실질적인 국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임

- 안보 자체가 포괄적 안보 또는 인간안보로 변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군사동맹은 외교적 자산의 한 부분에 불과하게 될 것임; 물론 군사안보의 중요성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군사안보만으로 국익을 지키기는 쉽지 않음; 특히 세계여론을 등진 전쟁, 비인간적인 참혹한 전쟁을 국익을 위해서 지지하는 것은 외교적 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적 신뢰를 상실하는 태도임
- 이미 남한 사회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 국가라는 별로 좋지 못한 평판을 얻고 있음
- 캐나다와 멕시코, 아프리카 국가들은 한국이 참조해야 할 주요한 외교노선을 보여주었음

○ 전쟁과 관련한 경제적 이득에 대하여

- 전후 국제경제질서의 변화를 미국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으며, 에너지 자원 확보와 전후 복구사업 참여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력을 능가하는 부정적 여파(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악화, 전쟁반대국가들과의 관계 악화, 국가의 대외이미지 손상으로 인한 협상력 약화 등)가 파병 때문에 다가올 수도 있음
-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경제발전과 사회경제체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국익 개념의 올바른 정립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 이라크전쟁에서 미국이 패배하거나 치명적 손실을 입을 경우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음

- 이미 미국은 침략전쟁을 시작함으로써 외교적 패배를 안게 되었음
- 새로이 형성될 국제질서는 미국의 독주를 막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미국 또한 이를 수용해야만 전쟁에 따른 부정적 여파(전후 국제사회의 비난,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경제침체 등)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7. 이라크전과 한반도핵위기

○ 당장 북한의 핵무기개발프로그램에 따른 북·미관계 악화에 직면한 남한에게 이라크전 파병은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가

- 남한의 미국 지지와 파병결정은 미국이 남한에 대해 부채의식을 느끼도록 하는 전략적 선택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이미 실효성을 상실했음; 남한 정부는 거래가 없었다고 했으며, 다만 한·미 정책공조에 좀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주장만을 하고 있음; 미국은 여전히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모든 수단을 다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과연 남한 정부가 이라크전 상황에서 적절한 정책대안을 개발하여 북한핵문제의 해결을 주도하는 것을 미국이 용인할 것인가
- 미국이 내세운 이라크전쟁의 명분을 고려할 때, 미국이 평화적 수단만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임
- 이미 이라크전 자체가 북한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음; 북한 지도부에게 이라크전은 미국 부시 정부의 공격성을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계기임
- 남한이 결코 미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인식을 북한 지도부에 심어줌으로써, 남한의 대북 협상력이 약화될 것임; 최근 남북 당국간 접촉이 중지된 사실에 주목해야 함; 내

달 초로 예정된 남북장관급 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인지 매우 불확실함

○ 이라크전의 조기 종식

- 미국은 전쟁을 효과적 수단으로 확인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대화보다는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큼
- 당장 군사적 수단을 북한에 사용하지는 않겠지만(이라크전의 피로), 북한과의 대화는 북한의 양보가 없는 한 추진하지 않을 것임
- 북한은 대외관계 개선 정책이 봉쇄된 상태에서 경제적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미국에 대한 벼랑끝전술을 쓸 가능성이 높음; 북한에게 미국은 '위협'의 본산'임
-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강조하여 이라크전에 파병한 남한이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여지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음

○ 이라크전의 장기화

- 미국의 대북한 접촉 단절이 지속될 것임
- 이라크전에 파병한 남한 정부가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면서 국제사회를 설득할 명분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음
- 더욱이 남한 사회 내부의 대북강경론을 설득하는 자체도 쉽지 않음

○ 무엇보다도 원칙의 훼손 때문에 남한 정부의 입지와 설득력이 매우 좁아질 것으로 판단됨

8. 이라크전 이후의 세계질서와 한반도 평화

○ 이라크전 이후에 예상되는 세계질서 재편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발언권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 평화·통일외교와 한미동맹의 상관관계를 지금부터 조정해 가야 할 것임

- 평화·통일외교의 틀 속에 한미동맹을 자리매김하는 장기적 구상을 가져야 함
- 동북아지역협력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연계시키는 정책기조를 추구해야 할 것임